

대법관 후보 재제청부터 ETF까지… 여야 ‘국감 전쟁’ 예고

내달 6일부터 상임위 국정감사
국방위, DMZ 지뢰 진상규명 주목
부동산 시장 불안 등 공방 예상

여야가 국회에서 다음달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관 재제청 논란, DMZ(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관련 진상규명, 부동산 공급 확대, 단일종목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등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각 상임위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정쟁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며 이번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버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이 ‘조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과 완전히 다른 모습’,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파고·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향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고 입을 모았다”며 “대통령하고 만날 때는 앞에선 웃고 해외순방을 가니 갑자기 재제청 거부를 발표한 모습이 앞에선 웃고 바로 뒤돌아서서 비수를 쏘는 다든가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여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독립성을 존중해 국정감사 시작 시 모두발언을 하고 곧바로 퇴장한 뒤, 감사가 끝날 때 다시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이 관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시도가 ‘사법부 망신주기’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지난 21일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25사단 수색대대원들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중상을 입은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DMZ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장 인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뢰 폭발 사건 외에도 우크라이

나-러시아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이 국내로 송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해법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용산공원에서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의 규제를 완화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에겐 녹지를 물려주기 위해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부지의 규제 완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주거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호 공급 계획도 좋은 입지에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필요한 시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당이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

서?“집 가진 국민들은 세금 폭탄에 떨어 있다. 집값은 이 정권이다 올라놓고 집값 올랐으니 세금 왕창 더 내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행생 아껴 모아 집 한 채 장만하신 어르신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할 판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워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지목하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책임 소재를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중대한 위협행위가 확인될 시 특검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DMZ 지뢰사고 진상규명… ‘현장 vs 국회’ 격돌

지뢰 폭발로 수색대대원 3명 중경상
여당 오늘 현장조사로 진상 파악

여야가 지난 21일 DMZ(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25사단 수색대대원들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중상을 입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두고 연일 격돌하고 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현장조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자체 현장조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국회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야당이 맞서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오전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과주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도중 지뢰 추정 폭발이 2차례 발생해 수색 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군과 유엔사는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기동로 확보

및 작전 환경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與 “현장조사로 진실 확인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재발 방지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당의 선넘은 정치공세는 일축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최근 전방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폭발물의 출처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작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부연했다.

4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방위원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연일 현안질의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라고 요구한다”며 “그래서 국방위원들은 28일, 사고 현장 부대를 직접 찾아 점검하기로 했다.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놓고 질의하는 것보다 현장 지휘관과 작전 장병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훨씬 깊이 있는 검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며 “국방위를 열어 따지자면, 국방위원들이 함께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자라는 거부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28일 현장방문 계획을 알리며 “폭발사고의 원인과 경위는 무엇인지, 수색로 개척작전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사고 조사항동은 철저하게 또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방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발사고의 진상규명에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정작 국방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부한 것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 현장방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野 “국회에서 현안질의 열어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지뢰 폭발이 북한 측 소행일 가능성을 높게 제기하며 여당 주도의 현장방문이 진상규명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호히 말한다. 쇼하지 말라”며 “지금 의원들이 부대로 물러가도 대체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인가. 사고를 수습하고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부대는 지금 어느 때보다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사고 전 어떤 상황을 파악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왜 현장조사가 늦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국민 앞에서 답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지금, 이 안보 붕괴의 근본 원인은 이 대통령 본인”이라며 “이 대통령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조희대 재제청 거부… 민주당, 사퇴 압박 수위 높인다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현안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경위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타진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 측은 추석 연휴 전까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 외에 추가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 현안질의가 갈등 국면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의 반발로 실질적으로 현안질의가 개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다시 현안질을 추진하는 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통령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바로 비수를 쏘고, 뒤통수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기색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을 ‘사법부 길들이기·삼권분립 훼손’ 등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서다. 또 당청이 대법원과 갈등하는 상황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도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예진 기자 syj@

한동훈, DMZ 지뢰 사고까지 대여 공세

“北 눈치 보기”… 정부·군 대응 비판

‘김승원 자격수’로 나섰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를 촉구하며 안보 현안으로까지 대여 공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의원의 북당 논의에 선을 긋고 있어 당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로 장병 3명이 다친 가운데 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즉각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국의 현장조사 준비 과정과 대응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경수 기자 gws0325@